

전북 핵심예산 확보 ‘총력전’

도, 국회·기재부 예산 양측 연속면담… 국비 반영 폭 확대 온 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9일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핵심 인사들과 연속 면담에 나섰다.

이날 김 지사는 국회 예결위 심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맞춰 한병도 예결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잇달아 만나 전북의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 구축지원(261억원)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10억원)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건설(7억원) △새만금 헬프 산업클러스터 조성(5억원)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98억원) 등의 핵심 사업의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개발과 연계되는 미래산업 투자가 국가 전체 성장 기반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국회 심사 과

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같은 날 김종훈 경제부지사도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실과 면담을 갖고 △전북권역 통합 재활병원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순창 공설추모공원 △한의임상교육센터 △재난안전산업 진흥원 설립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도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 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윤건영 행안위 간사를 만나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의 행안위 법안소위 심의 통과도 건의했다. 현재 행안위에는 한병도·조배숙·이원택·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법 개정안 42건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청년농업인 및 스마트 농업 연관산업 지원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 연장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 수요와 인구소멸 대응을 뒷받침할 주요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일정에 맞춰 논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즉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휘부를 중심으로 정치권·기재부와의 직접 면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과 미래산업, 복지·안전 분야는 전북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전북이 도약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9일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나 전북의 핵심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대 10개가 지역 깨운다” | 김종영 경희대 교수, 전북대서 강연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권역 구축 강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8일 진수당 글로벌홀에서 김종영 경희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이재명 정부의 유니콘 정책: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인 김 교수는 지역대학 쇠퇴, 수도권 집중, 교육·의료 격차 심화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이를 해결할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을 전국 권역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대학이 국가 경쟁력의 근간임을 보여주는 세계 사례들을 상세히 제시했다. 독일·미국·중국의 대학체제 변화와 혁신 사례, 특히 중국 대학의 가파른 부상은 국가의 전략적 투자와 정치적 리더십이 결합될 때 대학이 어떻게 국가발전의 엔진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지식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수도권 과밀과 지역 쇠퇴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서울대와 같은 연구중심대학이 전국 주요 권역에 반드시 자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의 지역혁신 정책이 수십년간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으로 ‘세계 수준의 대학 부재’를 지목했다.

김 교수는 실리콘밸리, 오스틴, 보스턴, 샌디에이고 등 세계적 혁신도시들이 강력한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음을 사례로 들며, “대학이 강해야 기업이 오고, 기업이 와야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대학, 글로벌 기업, 정책적 비전을 가진 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두꺼운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체계(UC System)를 대표 모델로 제시하며 탁월성과 접근성을 동시



지난 18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글로벌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니콘 정책: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된 가운데, 김종영 경희대학교 교수가 강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에 실현하는 대학 네트워크가 국가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대의 예산이 약 2조 원인 반면, 지방 거점국립대는 6천억 원대에 머무는 구조적 격차를 지적하면서, “거점국립대 10개에 서울대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국가적 균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 불균형이 결국 의료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도 짚었다. 서울대병원의 지방 환자 비중이 절반에 달하고, 서울의 ‘빅5’ 병원을 찾는 지방 환자가 연간 70만 명을 넘는 현실을 제시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이기도 하다.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고통을 해소할 근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대학체제가 탄생하기까지 100년에 가까운 정치·사회적 투쟁이 있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또한 지역민과 지역 정치인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특강은 우리

구성원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현주소와 미래 전략을 실감 있게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대학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육군 35사단 통합방위훈련

육군 제35보병사단(이하 35사단) 이하 이순신여단은 19일,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고향 공설운동장 및 KBS 김제 송신소에서 적 테러 공격에 대비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여단 예하 2개 대대와 기동중대, 경찰, 소방 등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합방위작전 임무 수행능력과 중요시설에 대한 비상상황을 발생 시 대응 능력을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만호 기자

“내란 세력 청산·민주헌정질서 회복 앞장”

민주 도당, 제38주기 11·19 위령제 맞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내란적 성향의 정치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헌정질서를 굳건히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제38주기 11·19 민주화운동 희생자 위령제를 맞아 발표했다. 김광훈 도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1987년 군부독재 종식과 민주정취를 위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의 전북 진안·장계 유세에 참여한 뒤 불의의 사고로 숨진 열 분과,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한 열일곱 분의 희생을 기리는 위령제가 장수군 변안면 교동리 위령비에서 거행됐다”고 전했다.

도당은 11·19 영령들의 현신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의 토대가 되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당은 “여전히 극단적 보수 성향과 결별하지 못한 정치세력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역사의 진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도당은 당원과 도민의 뜻을 모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내고,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38주기 위령제의 정신을 되새겨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돌입

전북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500여명 총파업 나서 학교비정규직 사상 최대 규모…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요구

“교육감이 직접 나서 학교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노동조합)가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총파업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500여명이 참가한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다.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미화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지만 각종 수당은 절반 수준이고, 근속이 길수록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교육기관에서조차 비교육적인 차별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무책임과 무관심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의 수렁으로 계속 밀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하루 수백 명의 학생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노동자들은 고온·고습한 환경과 조리휴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 현재 폐암 산재 인정 사례는 180건에 달하고, 1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전북지역도 4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으로 확진됐으며, 폐결절로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한 노동자는 전체 검사자 2269명 중 836명(36.84%)가 양성결절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책임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배정된 환기시설 개선 예산마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국회를 통해 학교 급식법을 개정해 급식노동자의 안전 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아울러 학교비정규직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별해소에도 직접 나서기로 했다.

국정 기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기본급 추가 인상과 명절휴가비 정규직 120% 동일 기준이 학교비정규직에게도 즉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11월 20일, 21일, 12월 4일, 5일에 걸친 릴레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조 합 장 김 광 철
경제상임이사 김 형 문
신용상임이사 이 광 순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夫)의 세상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gunsan.suhyup.co.kr

열린 수협!
희망의 수협!
수산인에게 풍요로움을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